

네이버·카카오 본격 길들이기?... 경영권 침해 우려 어찌나

규제 팬데믹 <下> 플랫폼 규제

공정위·정치권 규제 입법 속도 데이터 관련 등 전방위적 압박 압박에 상생안으로 대응 나서 스타트업도 규제 대상 포함 지적

네이버·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규제에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치권은 일제히 빅테크(대형 IT기업)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론은 플랫폼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많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묻은 결과 51%가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플랫폼 M&A, 검색 시스템 모두 제재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총 7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 1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카카오, 네이버, 이통3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상품 클릭 수와 판매실적, 구매평 등의 항목을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작성하는 표준 계약서에 강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계약서 명시·교부 의무를 중심으로 한 규제를 적용하고, 입점업체와 자율적으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이나 포털사이트·온라인 물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안전을 향상하고, 선택권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상품 검색 결과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노출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 보장 차원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을 정초준하면서 공정위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다.

◆잇단 철퇴에 '상생안' 내놓는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방위적인 규제 속에서 위기 탈출을 위한 '상생안'을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중소기업인 지원정책을 펴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을 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올인원'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컨설팅'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의 경우 과거부터 1위 포털 사업자로서의 지배적 위치에서 다양한 독과점 우려에 시달려온 바 있다. 지난해에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과 동영상 많이 노출 시켰다고 판단돼 공정위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네이버의 사업 확장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르는 다소 보수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가 클라우드, 웹툰, 핀테크 등 중소기업 침해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 분야 위주로만 투자하면서다.

카카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를 현장 조사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를 카카오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업을 철수하고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추가로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상생 기금도 5년간 3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또,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

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을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조사를 통해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문제다. 최근 공정위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매출액 100억원, 거래액 1000억원 이상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당장 100개가 넘는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 쪽으로 쏠리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 해결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카카오페이와 손 잡았는데... 보험사 '난감'

규제 압박에 카카오페이 보험 제동 일부 보험사 관련 상품판매 중단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규제 압박으로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았던 보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카카오페이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 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보·현대해상) 등의 판매를 지난 12일 잠정 중단했다.

보험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했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했다.

카카오페이가 보험 관련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데는 금융당국의 규제 경고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융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25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검토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감안했다. 소비자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계약 의사결정의 중요요소 중 하나임에도 플랫폼이 아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는 것도 대비했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아서다.

비교적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이 적었던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다행히 타격을 피해 간 모습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경우 협업을 통한 제품을 출시하기보다는 보통 청부서 및 납부 서비스 등을 이어왔다. 따라서 크게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제휴가 활발했던 손보사는 타격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투자과 절세를 한번에!

하이투자증권 중개형 ISA

다양한 상품을 한 바구니에!

펀드, ELS, ETF 등과 국내주식까지 한 계좌 안에서 모두 운용

손익통산으로 과세금액 줄이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과 상계되어 과세되는 금액 절감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 분리과세!

순수익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최대 400만원(서민형) + 분리과세(9.9%)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까지!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전 시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하이투자증권의 특별한 선물!

가입금액에 따른 현금리워드

10,000 1백만원 이상	20,000 5백만원 이상	30,000 1천만원 이상
--------------------------	--------------------------	--------------------------

기간 | 2021.09.13 ~ 2021.11.30
대상 | 중개형ISA 가입고객 중 이벤트 종료일 현재기준 금액 유지 고객 (금액별 선택순 각 500명)

하이투자증권의 평생 선물!

온라인 거래 수수료 평생혜택 (당사 최초 거래고객)

평생혜택

0.00363960%

기간 | 2021.09.13 ~ 2021.12.31
대상 | 기간 내 중개형ISA 가입고객 (비대면 가입고객 & 당사 최초 거래고객)

가입방법

영업점 방문 및 상담 후 가입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가입가능

우측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하이투자증권 MTS인 '힘(Hi-M)'으로 연결되며 별도의 App 설치없이 쉽고 빠르게 계좌개설이 가능

※ 투자자는 이 계약에 대하여 당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또는 국제청 부적력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상기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ISA내 운용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계좌의 국내 주식 일반 위탁수수료율은 거래금액과 매체에 따라 0.0972%~0.4972%가 적용됩니다.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 1588-7171 / www.hi-ib.com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4228호 (2021.09.13~2022.09.12)